

# 문흥식 체포...광주 붕괴 참사 수사 '금물살' 타나

### 문씨 신병처리·현장업체 선정 개입·재개발 비위 '복마전' 알선·금품수수·변호사법 위반 영장 신청...추가진술 촉구

광주 붕괴 참사 직후 해외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업체 선정·재개발 비위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업체 간 공사 나눠 먹기', '공사 단가 후려치기', '공사비 부풀리기', '재개발 사업 추가 비위'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문씨가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남 미국으로 도피한 문 전 회장이 자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문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공법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선정을 알선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문씨는 붕괴 참사 발생 초기부터 해당 재개발사업 현장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으나, 참사 발생 후 나올 만이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석 달째 귀국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외 도피한 문씨를 뒤늦게 입건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문씨의 변호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귀국을 설득하는 한편, 붕괴 참사 관련 업체선정 비위를 수사해 문씨와 함께 업체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공범 브로커 이모(74)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8월 중순께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문씨가 이미 입건에 앞서 도주한 경력이 있어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영장을 집행해 48시간 이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하는 경찰은 조사에 속도를 내 이날 중이나 내일 새벽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인데,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행위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범죄'에 적용된다.

민간분야이지만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공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의제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업체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알선한 혐의로 도피 중이던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지난 11일 밤 서부경찰서공역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김애리기자

할 수 있어, 조합 측에 청탁·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문씨에게도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문씨가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 구체적인 증거와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참사 현장 업체 선정과정

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공범이 이미 구속됐고, 문씨가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처

벌받고 도주한 전례까지 있어 문씨의 신병 처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수사는 문씨가 구속된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이전 사업인 3구역 사업 추진 시절부터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문씨가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재개발 사업 비위 전반을 밝힐 유의미한 추가 진술을 할지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문씨가 청탁·알선한 업체가 조합·원청에 의해 실제 사업 시행 업체로 선정돼, 불법 업체 선정 과정의 추가 연루 자들을 밝히는 데 문씨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우선 집중적으로 조사해 신병 처리할 계획이다"며 "다른 수사 사항은 구속된 이후에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 최대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브로커 공사 수주 과정 금품 수수 행위를 비롯해 수주업체 간 입찰 담합과 불법 재하도급, 재개발 조합 자체의 이권 개입, 재개발 사업 자체 비리 등의 여부를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동수기자

## 정부 고용 정책 악용 지원금 가로챈 일당 송치

### 한 달간 보험 가입·납부 뒤 보조금 신청...브로커 2명 구속

가짜 직원을 모집해 한 달간만 보험을 가입·납부하게 하는 등 정부의 고용 정책을 악용해 지원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부 정책 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9)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사업주 14명을 불구속 송치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정책자금인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비용 대부금, 두리누리 사업자금, 청년 디지털 보조금 등 총 3억원을 불법으로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 각 기업의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 수급 요건이 완화하자 이를 악용해 정책자금을 가로챘다.

가짜 직원을 모집해 한 달간만 4대 보험을 가입·납부하고 즉각 휴직시킨 후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신청해 가로챘다.

브로커 A씨는 시험 삼아 해본 허위로 지원금을 가로챈 행위가 수월하게 진행되자, 다른 브로커 B씨를 동원해 사업주와 가짜 직원을 본격적으로 모집해 범행을 저질렀다.

각 사업주는 1인 사업장 등 영세한 사업체의 소유주이거나, 폐업컴퍼니 등

을 차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받은 총 3억원의 지원자금을 브로커 50%, 사업주 20%, 가짜 직원 30% 등으로 나눠 가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1곳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가 여러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 브로커 2명을 찾아내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관련한 사업주 등 14명을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영세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위해 요건이 완화된 틈을 타 혈세를 가로챈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치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 생활고 겪어온 치킨집 사장 숨진 채 발견

여수에서 생활고를 겪어온 치킨집 사장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2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3분께 여수 한 치킨집에서 사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조사에 나섰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진선기자

## "횡령 수사 무마" 父 속여 8억 쟁긴 아들 실형

### 광주지법, 알선수재 등 혐의 40대 4년 선고

유력인사를 통해 횡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며 친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을 속여 8억원을 가로챈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6월 아버지 등 4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유력 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들에게 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아버지 등 전남의 한 지역 농협 미곡처리장 관계자 3명과 해당 농협 조합장은 허위로 쌀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와 목은쌀과 혼곡한 쌀을 햅쌀이라고 속여 판 혐의 등으로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씨는 아버지에게 "광주와 제주도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좋은 친구를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며 비용을 요구했다.

정씨 아버지는 함께 수사를 받던 사람들과 함께 돈을 마련해 9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건넸다.

그러나 유력 인사 친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정씨가 돈을 쟁길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수기자

## 전립선 수술하다 신장 잃은 환자 승소

전립선 수술 중 요관이 손상돼 결국 신장 한쪽을 잃게 된 환자에 대해 병원 측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이은정 부장판사)은 A씨가 조선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가 A씨에게 총 9천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말 배뇨 불편감을 이유로 병원을 찾아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과 회복 후 방광개설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후 수술 도중 우측 요관이 손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 측은 손상된 부위를 봉합하고자 우측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했지만 요관에서 지속해서 소변이 누출돼 결국 2019년 9월 초 A씨의 우측 신장을 절제했다.

A씨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요관에 손상을 입고 신장까지 적출하게 됐다며 재산상 손해 7천300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 등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수기자

## 60 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 "맛과 멋을 새롭게"

###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 야외 결혼식
- ▶ 칠순잔치
- ▶ 체육대회
- ▶ 야외회

**☑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